



| | | | | |
|---|-------|--|---|---|
|  | | 보 도 자 료 | | 수도권매립지 종료 |
| | | 배포일자 | 2021년 10월 28일(목) 총 5매 |  환경특별시 인천 |
| 담당 부서 | 청년정책과 | 담 당 자 | • 청년정책담당 이진오 ☎440-4171 • 담당자 김예진 ☎440-4172 | |
| 사진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천시, 청년 일자리·창업 등 중점 지원해 청년 1위 도시로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 기존 52개(3,710억)→82개(6,916억)로 사업 확대 -
- 일자리 발굴, 창업 육성지원, 주거지원 확대, 인재양성 등 중점 추진 -
- 지자체 최대·최고 수준의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청년 공간, 청년 조직 추진 -

인천시가 2025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발굴과 창업·주거 지원 등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특색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1위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담은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수정)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해 9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율, 청년 고용 및 주거비 부담 증가, 청년 복지와 여가 문화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한편, 청년인구 감소 및 인구변화

대응정책 마련,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청년정책, 코로나19 장기화와 위드 코로나 등을 감안해 청년정책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박남춘 시장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청년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시는 지난 8월 5일 안영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형 청년정책 발굴 TF’를 구성해 시정 전반에 청년정책을 반영하는데 집중해 왔다.

TF는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은 물론, 인천 소재기업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일자리, 주거생활, 여가문화, 교육 등 각 분야별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발굴과 대책을 마련해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할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청년정책 기본(수정)계획은 취·창업 일자리분야, 주거·생활분야, 여가·문화분야, 배움·체험분야 등 4대 전략으로 구분해 전략별 실천과제와 20개 중점추진과제, 82개 세부 단위사업을 담고 있다.

세부 단위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54개였으나, 28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돼 82개로 늘었으며, 사업비도 당초 3,710억 원에서 6,916억 원으로 3,206억 원이 증가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사업예산도 43개 사업, 473억 원에서 82개 사업, 1,20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대 전략별 중점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① 취·창업 일자리분야는 기존 15개 사업(1,170억 원)에서 28개 사업(3,261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직접일자리 13만8,600명을 창출하고 19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창업벤처파크 조성,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15개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가 8,350명, 창업기업 1,173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② 주거·생활분야는 기존 10개 사업(847억 원)에서 22개 사업(2,705억 원)으로 확대됐다. 청년월세 지원확대, 청년주택 공급 확대(검단신도시 청년주거단지 조성), 청년근로자 기숙사 지원, 대학생기숙사 증축 등 9개 사업을 통해 11,700세대의 청년을 지원한다. 또한,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청년 저축계좌, 행복씨앗통장, 청년마음건강 및 청년 재정설계 등 13개의 청년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해 청년자산형성 22,150명, 생활안정지원 84,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여가·문화분야는 기존 3개 사업(34억 원)에서 8개 사업(126억 원)으로 확대됐다.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청년 문화축제, 청년직장인 퇴근길 콘서트 등 일과 휴식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8개 사업을 통해 3,500명 지원하고, 청년문화공간도 12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④ 배움·체험분야는 기존 8개 사업(407억 원)에서 18개 사업(493억 원)으로 확대됐다. AI 전문기술인력 양성, 청년콘텐츠 우수인재 양성,

환경분야 청년인재 양성 등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18개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인원 8,900명, 인턴십 3,8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별 사업에 포함된 다양한 특색사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대 · 최고 수준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청년 공간 및 시설 확대, 청년 조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사업이다. 36억 원을 투입해 소셜벤처기업 육성, 청년 로컬라이저, 청년 참여형 인천 관광 활성화 사업 등 5개 신규 사업에 전국 최대 규모인 1,200개팀, 2,680명의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319억 원을 투입해 청년사업의 중심이 될 청년센터 구축과 청년공간 유유기지도 2곳에서 9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 쉼터와 네트워킹 공간 제공, 취 · 창업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윈스톱 정보제공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포털도 2022년에 구축 예정이다.

청년조직 확대 및 법제 정비에도 나선다. 청년의 시정 참여와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청년조직을 56명에서 1,010명으로 확대하고, 권익 보장을 위한 청년관련 조례(2→5개)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된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수정)계획(2021~2025)」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2025년까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향후 정부 뉴딜정책과의 조율로 청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별 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 체계적 지원과 함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19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며, “인천 청년의 자립 기반과 미래를 대비해 일자리, 주거안정, 자산형성, 문화와 여가 인프라 구축, 맞춤형 인재양성 및 청년역량 강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 참고 >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수정)계획(2021~2025) (요약)